

'5일 시한 연장' 예산안, 돌파구 만들까... 입장차 '팽팽'

여야 '15일 합의 처리안' 수용 '법인세 인하' 이견...추가 협상 방침 野 "합의 안되면 자체 수정안 처리"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온 여야가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닷새의 시간을 벌면서 막판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김 의장의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제안을 받아들기는 했으나 일각에서는 협상의 물꼬를 틈을 만한 계기를 단기간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의치 않으면 자체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합의의 불발 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없이 처리된 적은 없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일대일 담판을 벌였으나 평행선만 달렸고, 끝내 협상 결렬 선언에 이르렀다.

국회에서 머물며 협상 상황을 지켜보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다 못해 두 원내대표를 불러 모았다.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 테니 그때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는 제안이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인, 야당의 자체 수정안인도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11일)과 맞물려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로선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의 최후 통첩성 중재로 여야는 당초 합의 처리를 기대했던 11일을 기준으로 15일까지 나흘을, 이날 의사 일정 합의를 기준으로 닷새의 시간을 벌 셈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지난 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지난 9일)마저도 넘긴 만큼 본회의 날짜를 다소 여유 있게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국회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도 떠안게 됐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19년 12월 10일 처리된 2020년도 예산안이었다.

여야는 이날도 최대 충돌 지점인 '법인세 인하'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 경찰국·임대주택 예산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견해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간극을 좁히지 못한 두 원내대표는 협상 난항의 원인을 여전히 상대에게 돌리며 신경전을 거듭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오후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외자를 유치해 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발목을 잡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 좁혀진 부분도 없는 상태. 오늘 더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그간 얘기해왔던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왔던 것들을 (오늘 협상장에) 그대로 가져왔다. 협상을 더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남은 쟁점에 대해 여당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꼬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전히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이 고집을 너무 강하게 피우고 있다"면서 협상 난항 요인의 하나로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듯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 모두 닷새의 시간을 번 만큼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2시라는 처리 시한이 정해졌다. 그때까지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질 바란다"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지금까지 어느 당이 일방으로 처리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예산)을 깔집해서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서민 예산 증액 못하면 서민 감세"

"예산 부수 법안 권한 행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 제3 안을 만들려면 서민 지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서 서민 삶에 도움이 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타협이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거부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게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반면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다른 분야에서 서민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다"며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브리핑

5·18 피해자 정신적 피해보상법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8차 보상신청 기간과 정신적 피해보상, 장애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새롭게 규정한다.

같은 기간 장애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제8차 보상 범위에 포함했

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단서를 신설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서 한정한 5·18 관련자는 성폭행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

민 의원은 "오월의 진상규명과 예우, 보상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이라며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연합뉴스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토지구매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임산부 배려 캠페인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도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로 구분어 잘 안되는 임신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보건복지부 | 광주광역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